

한국 평화운동 15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평화조건 · 쟁점 · 전망 -

장 영 권*

목 차

- 제1장 전쟁 없는 한반도 그리고 인류의 꿈
 제2장 평화와 평화운동의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
 제3장 한국 평화운동 15년의 전개와 발전과정
 제4장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 : 평화복합체적 평화조건과
 평화운동 쟁점
 제5장 한국 평화운동 15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제1장 전쟁 없는 한반도 그리고 인류의 꿈

“평화를 원하기든 평화를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peace.)”

이 말은 “평화를 원하기든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는 로마제국의 명장인 베제티우스의 유명한 금언을 ‘전쟁’ 대신 ‘평화’로 바꿔 표현한 것이다. 인류는 수천년 동안 베제티우스의 ‘주술’에 길러 전쟁을 준비해 왔고, 그 결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베제티우스의 후예들이 “평화를 원하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외치며 전쟁준비를 촉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온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쟁 준비가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베제티우스의 주술을 깨고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 이 글의 필자는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사)한국평화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이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국제정치 전공)을 수료하였다.

는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¹⁾

최근 북-미간의 핵문제 등으로 갈등과 파국의 순환은 '전쟁 없는 한반도' 즉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은 미국의 패권확대 전략과 중국의 패권 도전으로 준비경쟁이 확대되고 있어 평화위협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방주의적 개입주의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초 덩샤오핑(鄧小平)의 등장으로 추진해온 도광양희(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게 한 뒤,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적, 화평굴기(和平崛起: 평화롭게 부상한다)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

미국은 일본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등 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패권유지선'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냉전기 대소봉쇄 정책을 추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탈냉전후 실질적인 대중봉쇄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위협론'을 저지시키는 한편, 러시아를 시작으로 하여 파키스탄, 심지어 인도 등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반미연대선'을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례 없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냉전시기에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는데 2004년에 이어 2005년 8월에도 육해공의 대규모 첨단무기를 동원하여 미국과의 교전을 대비한 실전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질서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세계패권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직접 물리적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끊임없이 긴장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집단적 패닉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도 쉽게 평화관계로 전환될 것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정부의 역할 및 한국

1) 장영권,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2005년 전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5년 6월 10일), 2~3쪽.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동북아의 세력균형 유지전략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웠지만 동맹론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책상서랍 속으로 밀어넣어져 있는 상태이다. 국력의 약화와 논리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결국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나서야 할 주체는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평화운동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전개해온 평화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 인류의 꿈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평화운동의 개념과 전개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평화의 조건에 따른 성과, 평화운동의 쟁점, 전망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2장 평화와 평화운동의 개념과 이론적 분석틀

1. 지속 가능한 평화와 복합체적 평화개념

평화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가치 대립적이어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평화의 개념은 탈냉전기 이후에 새로운 평화위협 요인이 등장하고 있고, 이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평화의 개념은 우선 '전쟁의 방지'라는 소극적 개념을 중시한다. 내전을 포함한 전쟁의 부재상태로서의 평화는 국민들에게 행복, 복지의 충실, 번영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국가간²⁾의 이익 추구에 따른 갈등과 군사적 경쟁 및 위협이 없는 상태도 평화의 개념속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평화의 개념을 단일한 의미가 아닌 '복합체적' 의미로 고찰해야 한다.

2) 갈등의 대상은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국가간의 평화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복합체적 의미의 평화란 '인권·자유·정의'와 같은 원리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인류공동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국가간에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가치 추구에 따른 갈등, 정치적 주권침해와 군사적 위협, 착취와 이를 위한 폭력,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국가간과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구조적 폭력과 착취의 해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체적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 국가간에 전쟁의 부재와 불간섭뿐만 아니라 갈등·대립·폭력의 근본원인까지 제거하여 복지와 번영을 위한 인류공동체를 형성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유지, 구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복합체적 의미의 지속 가능한 인류공동체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평화의 조건'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평화의 조건은 전쟁의 원인론을 바탕으로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이론을 원용하여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지역 및 국제분쟁의 원인론은 많은 이론적 분류가 성립되었지만 그것들은 대동소이하다. 한 예로 로젠(S.J. Rosen)과 존스(W.S. Jones)는 전쟁이론의 원인을 힘의 비대칭성, 내셔널리즘, 경제적 자극, 군비경쟁 등 열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⁴⁾ 분쟁원인 및 행동의 대부분을 이 유형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크게 정치·군사적 원인, 경제적 원인, 문화적 원인으로 보다 추상화시켜 새롭게 유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화의 조건을 정치·군사적 평화(정치군사평화), 경제적 평화(경제평화), 문화적 평화(문화평화)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⁵⁾ 이것은 정치·군사적 문제, 경제적 문제, 문화적 문제에 있어서 대립·갈등이 확대되지 않으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 서문의 첫 문장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본질적인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의 인정은 세계에서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4) 즉, ①힘의 비대칭성, ②내셔널리즘·분리주의, ③국제적 사회 다원주의, ④커뮤니케이션의 실패, ⑤군비경쟁, ⑥외적 분쟁에 의한 내적 결함, ⑦공격본능, ⑧경제적 및 과학적 자극, ⑨군산복합체, ⑩상대적 박탈, ⑪인구제도 ⑫분쟁해결 등이다. Rosen, S.J and W.S. Jones, *The Logic International Relational*, 3rd ed., 1980, pp.307~336.

5) 국제분쟁의 동기를 분석한 라이트는 국제정치 of 장래의 문제는 남북문제가 동서문제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문화(이념, 가치)문제보다 경제문제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정치·군사적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세 가지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갈통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에는 구조적 폭력이 인간의 욕구를 다치게 해도 가해자가 확실치 않아 그 누구도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라고 보고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으로 구분했던 것을 확산시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의 삼각관계로 역동한다고 설명했다.⁶⁾ 갈통은 이러한 폭력과 관련 “만일 인간의 현실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실현이 그의 잠재적 실현 이하의 제약에 받고 있다면, 거기에는 폭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폭력의 개념이 ‘인간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고, 자아실현이란 원망에의 도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통의 이와 같이 정의된 폭력은 ‘직접적 폭력(direct violence)’과 ‘간접적 폭력(indirect violence)’ 또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문화적 폭력(cultural violence)’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⁷⁾ 직접적 폭력에는 전쟁, 테러, 린치, 폭행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적 폭력의 예로는 빈곤, 억압, 인종차별, 사회적 불공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가지 폭력의 모든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폭력은 문화적으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가치, 이념 등에 의한 것이다. 갈통은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갈통의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개념은 갈통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했으나 격심한 비판을 받고 있다.⁸⁾ 프랑스의 ‘전쟁학’의 창시자인 부틀(Gaston Bouthoul)은 “인간의 발육과 완전한 개화를 저해하는 것은 모두가 구조적 폭력”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갈통의 폭력개념은 완전히 혼란된 개념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갈통을 위대한 평화연구자라고 인정하는 불딩도 중대한 유보를 하고 있다. 그는 갈통의 개념은 오늘날 세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데에는 공헌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법의 발

6) Johan Galtung, "Nach dem Kalten Krieg gespräch mit Erwin Koller", Zürich (1993), p. 54. 박재신, "독일의 평화통일". <http://mail.swu.ac.kr/~swsi/exor/down/%B9%DA%C0%E7%BD%C5.hwp> (검색일: 2004년 4월 5일).

7) Johan Galtung, *Peace : Research · Education · Action : Essay in Peace Research*, vol.1 (Copenhagen: Christian Ejlertsen, 1975), pp. 29~40.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8) 渡辺昭夫의 위음, 권호연 옮김, 『국제정치이론』(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2), 219~220쪽.

견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갈등의 폭력 개념은 용어의 추상성과 접근의 모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쟁과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고 갈등의 이론⁹⁾을 원용하여 지속 가능한 인류공동체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지속 가능한 평화의 개념에 따른 평화의 조건들은 정치군사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의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정치·군사평화는 갈등의 직접적 폭력의 해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주권침해와 정치적 탄압, 전쟁·테러 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고 문화평화는 가치·역사·사상·제도 등의 왜곡·배척 등이 없는 상태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경제평화는 약탈적 경제구조형성과 이를 통한 경제적 수탈, 배분의 왜곡 등이 시정된 것을 의미한다.

복합체적 평화개념은 평화의 복합적 조건(경로)인 정치·군사적 조건, 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 등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인류공동체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조건(경로)'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정치군사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가 조화를 이룬 상태이고, 이러한 평화를 추진해가는 지역내 국가군을 이루는 복합적 집성체 또는 복합적 동학을 특히 '평화복합체(peace complexes)'라고 한다. 평화복합체론은 '평화는 지역내의 국가간 복합체적 경로(조건)를 통해 실현된다'는 명제이며, 이의 이론적 근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규모는 지역적 수준과 평화복합체적 영역이다.

평화복합체는 지역을 단위로 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평화조건들에 대한 주요 인식과 관심이 깊이 상호 연계되어 국가적 평화문제가 독자적으로는 분석되거나 해결될 수 없는 일련의 국가군이 참여하여 복합체적 평화조건들을 이행해 가는 '평화의 틀(peace system)'로 정의할 수 있다. 평화복합체의 내적 역학관계는 평화의 상호의존이 우호 혹은 적대관계에 의해서 추동되었는지에 따라 한 스펙트럼을 따라 배치되어질 수 있다. 부정적인 극단에는 갈등 조성(conflict formation)¹⁰⁾, 중간에는 평화

9) Johan Galtung, *Peace : Research · Education · Action : Essay in Peace Research*, vol.1 (Copenhagen: Christian Ejlert, 1975), pp. 29-40.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10) 여기서의 상호의존은 전쟁공포, 경쟁, 전쟁위협 등에 대한 상호인지로부터 발생한다.

레짐11), 긍정적인 극단에는 다원적 평화공동체12)가 위치한다.

2. 평화운동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이론적 관점 : 평화복합체적 접근

평화복합체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공동체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조건들을 평화적 방법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의 경로 또는 조건이 되는 세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³⁾ 첫째는 핵무기 등 첨단 군사력에 의한 전쟁 가능성의 방지, 즉 전쟁원인중 정치·군사적 원인의 제거이고 이를 제1평화의 조건인 '정치·군사평화'라고 한다. 둘째는 자본주의 세계 지배와 경제적 국제 질서에 내재된 억압·착취·불평등 등의 근본적 모순의 극복, 즉 전쟁원인중 경제적 원인의 제거이고, 이를 제2평화의 조건인 '경제평화'라고 한다. 그리고 셋째는 이들에 대한 문화적 의식과 행동으로 나타난 혁명적 저류(底流)의 표출의 해소, 즉 전쟁원인중 문화적 원인의 제거이고 이를 제3평화의 조건인 '문화평화'라고 한다.

제1평화인 정치군사평화의 내용으로는 전쟁 제한으로부터 군비 이외의 방법에 의한 안전보장, 군비 축소·폐지, 전쟁소멸, 전쟁수단의 해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발전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항구적 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대 또는 상대국에 대한 착취·불평등 등 경제적 요인이나 정의의 전쟁과 같이 가치·이념·종교 등 문화적 신념에 의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군사평화와 함께 경제적 전쟁과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제2 평화인 경제평화와 이념·가치 등 문화적 전쟁과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제3 평화인 문화평화를 동시 병행하여 실현해야 한다. 즉, 소극적 평화 속에 내재

11) 평화레짐에서는 안보레짐과 마찬가지로 국가들은 여전히 상대국을 서로 잠재적인 위협으로 취급하지만 그들간의 평화딜레마를 감소시키기 위해 재보장제도(reassurance arrangements)를 만든다.

12) 평화공동체안에서 국가들은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군사력을 사용한 전쟁을 예상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13) 장영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안과 이행전략"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5년 10월 참조.

된 경제적, 문화적 폭력을 전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여기서 제2, 제3의 평화개념이 중요하며 소극적 평화개념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평화와 문화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평화상태를 창조하는 실증적 인식과 방법에 의한 평화에의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는 평화의 세 가지 조건을 실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나아가게 된다.

평화의 조건이 되는 정치군사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개하는 총체적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회복(peace restoring), 유지(peace maintaining), 구축(peace building) 행위를 '평화운동(peace movement)'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방지, 회복하기 위한 운동뿐만이 아니라 전쟁의 실질적, 근원적 원인이 되는 경제적, 문화적 착취와 불평등, 억압, 폭력적 가치를 극복하는 일련의 총체적 행위들을 지칭한다.

<표 1> 한국 평화운동 관련 2005년의 주요 의제와 추진단체

평화의 조건	주요 평화운동 의제	주요 추진단체
● 제1평화 - 정치군사 평화	● 평화통일운동	● 평화통일단체 · 민화협 등
	● 반전평화운동	● 참여연대 등
	● 평화군축 · 비핵화운동	● 평통사 등
● 제2평화 - 경제평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대안운동	● 민중민주 진영
	● 남북평화경협운동	● 남북경협시민연대 등
	● 경제정의실천운동	● 경실련 등
● 제3평화 - 문화평화	● 민족주의 해소운동	● 아시아평화역사연대 등
	● 생명평화운동	● 개인적 차원
	● 인권 · 비폭력 운동	● 인권운동사랑방 · 교육관련 단체

다시 말하면 평화운동은 인간의 인권 · 자유 ·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쟁 · 테러 등 정치군사적 폭력, 착취 · 빈곤 등 경제적 폭력, 이념 · 가치의 억압 등 문화적 폭력을 예방 · 종료시키고 지속가능한 평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사람들의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일체의 시도나 총체적 행위이다.

평화운동은 평화의 본질적 실현의 세 가지 조건인 정치군사평화-경제평화-문화평화운동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하나의 '평화복합체(peace complexes)'를 형성한다. 이들 평화조건들은 평화복합체 안에서 상호영향을 주며 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평화조건인 세 요인이 상호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정치군사평화가 강한 우위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반도가 아직도 적극적 의미의 평화보다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인 '전쟁이 없는 상태'가 중시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군사평화운동의 평화통일운동, 반전평화운동 등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따른 특징을 지닌 반면 경제평화운동과 문화평화운동은 주로 한국사회 내부의 것이어서 그 분석과 접근방법이 다소 다르다. 또한 정치군사평화운동 단체와 경제평화운동, 문화평화운동 단체의 '운동 목표와 운동 양태, 방법'도 다르다.

정치군사평화를 위한 평화운동의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웨이커교¹⁴⁾, 불교도, 평화단체 등이 추구하는 반전평화주의이다. 이것은 전쟁의 부도덕성을 알리고, 침략국가를 규탄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의 적용을 통해 전쟁범죄자나 테러리스트를 응징하는 법규적 접근이다. 셋째는 유엔 등 국제기구나 제도를 통한 접근법이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접근법은 정치군사적 폭력을 예방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경제적, 문화적 폭력의 제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평화운동단체들¹⁵⁾이 평화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평

14) 최초의 평화운동 대중단체는 웨이커도들에 의해 1815~16년에 창설된 미국과 영국의 '평화협회'로 반전비폭력을 주장하는 조직이었다. 웨이커교도는 창립 이래 300년간 절대 평화주의를 내걸고 전쟁을 거부해 왔다. 이들에 의해 평화운동이 최초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15) 평화운동단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쟁을 정부 정책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 전쟁, 무기체계에 반대한다. 둘째, 평화는 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전쟁은 필연적이고 전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운명론을 거부한다. 셋째, 낙관주의(더 나은 상황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가능), 실천주의(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낫다는 신념), 대중주의(일반대중이 정치 변화에 개입해야만 하고 엘리트에게 정책결정을 남겨줄 수 없다는 믿음), 총체적 비전(보는 것이 상호 연결되었다는 믿음), 개인이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Keith Suter, "Peace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pp.787-788.

화북합체적 접근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어느 한쪽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면서도 구심점 없이 자전거의 바퀴살처럼 확산되는 현상도 보인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구심력을 갖고 확산되려면 평화북합체적 접근을 통해 정치군사적 평화, 경제적 평화, 문화적 평화를 동시 병행해 추진되어야 한다.

3. 평화운동의 의의와 중요성

우리는 습관적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사실은 인류의 자원과 능력은 우리들의 평화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결국 우리 모두는 바로 내일의 삶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즉 우리는 전쟁보다 다른 원인이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경제적, 문화적 폭력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1세기는 전쟁으로 잃는 수보다도 기아나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꺼져 간 생명이 훨씬 더 많다.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찾기 가 힘들고,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등 전쟁보다 더 생태환경의 파괴가 인간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군사적 폭력인 전쟁이 아니다. 전쟁보다 우리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경제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다. 21세기의 인류 평화의 과제는 전통적 평화인 전쟁의 방지뿐만이 아니라 착취와 빈곤, 차별 등의 해결과 이념이나 가치의 충돌 방지에 있다. 인류의 평화를 유지, 구축하기 위한 평화운동은 이제 모든 생명을 보존해야 가능해진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운동으로서 21세기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은 평화운동단체의 활동가들만의 몫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고 착취와 폭력의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눔과 공존의 세계 창조를 소망하는 모든 시민대중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각 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 정치 및 종교 등 사회지도자들, 법률가와 문화예술가들, 교육자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 땅의 시민과 민중들이 모두 평화운동의 주인공들이 되고

참여자들이 되어야 한다.¹⁶⁾

오늘날 세계평화운동에서는 국제관계분야에서 민간인의 역할이 점점 두드러지는 가운데 평화운동단체들간의 국제적 연대가 깊어져가고 있다. 온라인을 이용한 새로운 운동방식들이 등장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정보교류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고, 국경을 넘어선 반전평화운동의 눈부신 약진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에 의해서 배태된 지상의 폭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개인적 수준에서, 국제적 수준까지 다양하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인간만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반대 운동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인간의 운동, 생명을 위한 생명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 생명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이고 이를 위한 운동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운동이다.

평화운동은 '나'를 살리는 자기구제, 인간구원의 생명운동이다. 평화운동은 베품과 나눔, 그리고 상호존중을 통한 평화공존운동이다. 철학과 이론을 넘어 생존을 위한 삶의 실천원리가 바로 평화운동이다. 평화운동은 인간, 자연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평화적 공존운동이다. 21세기는 평화운동에 의하여 인류와 생명의 미래가 결정된다. 1960년대 독일의 대표적 지성 바이제커는 "평화는 인류 생존 가능성의 조건이다"라는 명제를 내놓았는데, 이 명제는 극한적 폭력이 만연하는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남느냐 절멸하느냐" 명제속에 평화의 간절한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한다.

제3장 한국 평화운동 15년의 전개와 발전과정

1. 세계 평화운동의 보편적 흐름과 현황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려는 갈망은 인간의 생명존중의 본능적 욕구에서 출

16) 박성준, "평화 · 평화학 · 평화운동", <http://www.demos.or.kr/issue/lecture9.html>(검색일: 2005년 12월 16일)

발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평화운동은 역사상으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그 당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평화운동의 이론적 뿌리가 되는 평화사상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나 동양의 공자·목자 사상에서 칸트의 영구평화론 등 근대 휴머니스트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 사상적 계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평화사상이 대중적인 평화운동으로서 형태를 취하며 행동으로 촉발 시키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친 시기, 즉 세계가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 이후의 일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사회주의운동이 대중적 평화운동의 주체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식민지 피압박민족의 반제국주의·민족해방운동과 자유주의세력에 의하여 평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평화운동은 제국주의에 억압되어온 식민지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을 촉발시켰으며, 1927년 국제반제동맹을 결성, 국제적 규모의 제국주의 반대·민족독립 지지 운동으로 확대되었다.¹⁷⁾

1930대에 이르러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대륙침략을 시작하였고,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대두하여 독일의 히틀러가 침략을 위한 군비확장에 나섬으로써 세계적으로 또 다시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2년 8월 암스테르담에서 제국주의전쟁에 반대하는 국제반전대회가 개최되어 각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사상 초유의 국제적 규모의 반전대회로서, 정당·사상·신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반전평화주의자들이 결집하였다.

평화주의자들에 의한 반전평화운동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는 못했지만 파시즘 타도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로 이끄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또 반전평화운동의 경험과 성과는 전후의 새로운 국제적 체조건하에서 전후 세계의 평화운동으로 계승 발전되어 나갔다.

세계 평화운동이 현대적 의미에서 명확한 형태로 확산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전 세계인구의 80%가 전쟁에 휩쓸리게 했으며 5600만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부터이다. 1차 세계대전에 이어 2차 세계대전으로 전쟁이 주는 참담함을 목격한 세계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겐 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기 위하

17) <http://kr.dic.yahoo.com/search/enc/result.html?pk=13767300&field=id&type=enc&n> 평화운동(야후 백과사전), <http://www.happy-campus.com/knowledge/directory/report/view.hcam?no=1160383>(검색일: 2005년 12월 10일).

여 국제연합(UN)을 창설했으며 평화운동가들은 세계에서 반전, 반핵을 외치며 활동을 전개했다. 평화운동은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에 그치지 않고 반핵, 인권, 소수자 권리 보호, 차별 폐지, 빈곤추방, 지속가능한 개발 등 평화의 의미가 확대되어가면서 그 활동 영역도 넓어졌다.

유럽중심으로 전개된 평화연구와 이의 성과물로 추진된 평화운동은 1960년대에는 미소냉전의 격화를 배경으로 제3세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의 새로운 사회운동은 서구 민주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현상을 변화시켰다. 시민주도운동, 자기구제그룹, 지역주의적 운동, 여성운동, 환경보호운동, 원자력이용 반대운동 등과 함께 평화운동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의 사회적, 정치적 삶에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성된 탈물질주의와 함께 사회운동의 이슈들이 정당 등 제도권으로 흡수되며 유포피아를 기치로 한 평화운동은 약화되었다. 평화운동 등을 포함한 사회운동의 급작스런 도전은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삶 안으로 전파되었으며, 환경보호·군비축소 등의 의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평화운동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미국의 잇단 전쟁과 세계화로 '반전반미'의 세계적 연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평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이 넓은 의미의 평화운동, 즉 인간의 인권·자유를 위한 삶의 질의 확대차원에서 다양한 평화의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평화의식과 평화운동의 확대는 생활속에서 다원적으로 분산된 문화의 터전 안에서 '특수한 것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독특한 평화적 삶의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2. 한국 평화운동의 태동과 성장

세계평화운동이 150년 안팎 되었다면 우리나라의 평화운동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15년 정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에 이은 군부독재정권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평화운동을 곧 이념과 연결시켜 억압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평화운동보다는 반독재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활발했던 게 사실이었다. 분단, 한국전쟁, 이념갈등 등의 외적 요인으로 평화운동이 일찍부터 활발해

야 했음에도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의 평화운동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장되며 자유로워진 후, 1990년대 들어와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 몇몇 평화운동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평화운동이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것은 '반핵평화운동연합'이 창립된 1991년 3월 13일부터이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평화운동단체가 출범하고 활동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⁸⁾ 반핵평화운동연합은 재야와 시민단체의 중간적 성격을 띠었지만 반전반핵·군축평화운동을 대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한국 최초의 평화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다.¹⁹⁾

당시 반핵군축운동은 울진·영광·안면도·매항리 등 전국 각지²⁰⁾와 '반핵평화운동연합' 등 여러 부문단체 조직운동, 그리고 보건의료인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운동과제로 대두되어 활발한 평화운동을 촉진시켰다. 반핵군축운동은 노동운동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 통일운동과 함께 '평화운동'이라는 한 축을 형성

18) 1989년에 창립된 것으로 알려진 '녹색평화시민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통일관련 단체 중 '평화'라는 명칭을 붙인 시민단체가 있으나 이를 순수, 대중, 전문성 측면에서 평화운동단체의 효시로 보기는 힘들다.

19)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홈페이지에서도 한국 최초의 평화운동단체로 '반핵평화운동연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반핵평화운동연합은 당면과제로 ① 핵기지·핵발전소 공동실태조사 ② 핵관련 피해지역의 대중투쟁 지원 ③ 지역내 반핵평화운동단체 설립지원 등 3개항을 설정하였다. 장기적 과제로 ① 핵무기 배치상황과 군사전략 정보 공개 요구 ② 핵기지 철거, 평화협정 체결 쟁취 ③ 핵발전소 신규건설 반대 ④ 반핵법 제정운동 ⑤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 ⑥ 군비삭감 ⑦ 군사문화와 반생명문화 척결 등을 설정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정책실 연구원 김삼석씨 등)가 안기부에 의해 조작간첩으로 몰리는 등 사실상 당국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

<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tro.html>(검색일 : 2005년 12월 6일)

20) 한국 반핵운동은 1987년 전남 영광주민들의 어업피해 보상투쟁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원자력발전소는 민족중흥의 불로 일컬어지며 지역경제의 발전은 물론 산업화, 문명화의 첨병으로 인식되어질 때였으므로 비록 어업피해 보상운동 차원이었지만, 이 일은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이어 중수누출, 원전직원 사망, 기형아출산 등 원자력발전 관련 사건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988년 12월 서울에서 환경·보건단체들이 지역주민들과 '반핵평화시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반핵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뒤 1989년 영덕지역과 영광지역, 1990년 안면도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맞아 반핵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전용'이 아닌 '군사용'에 대한 반전반핵운동이 발아하기 시작했다.

하기 시작했다.

<표 2> 한국의 평화운동단체 설립년도와 현황21)

(2005년 12월 20일 현재)

1991~1998년 설립단체 (11개)	1999~2002년 설립단체 (15개)	2002~2005년 설립단체 (13개)
*반핵평화운동연합(91.3.13)	*평화공동체(99.2.1)	*비폭력평화물결(02.9)
*세계평화여성연합(92.4.10)	*평화의숲(99.3.27)	*참여연대
*평화통일 남북나눔운동 (93.4)	*평화네트워크(99.9.10)	평화군축센터(02.10)
*한겨레평화통일협회 (94.3.10)	*대전평화포럼(99)	*평화만들기(02)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94.6.2)	*이라크평화네트워크(99)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02)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94.7.2)	*인권평화 국제민주연대(00.2)	*아시아평화인권연대(03.4.1)
*세계평화청년연합(94.7.26)	*평화포럼(00.8.18)	*생명파평화(03.6)
*전북평화인권연대(94.12.10)	*한반도평화운동본부(00.10.30)	*평화바람(03.11)
*평화를만드는여성회(97.3)	*6·15와한반도평화 통일연대 (01.3.15)	*평화3000(03.11.18)
*평화인권연대(98.5.17)	*평화운동연합(01.5.2)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03)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98.6)	*평화통일시민연대(01.9.21)	*전쟁반대긴급행동(03)
	*동북아평화연대(01.10.27)	*코리아평화연대(03)
	*평화를가꾸는사람들(01)	*한겨레평화공동체(03)
	*평화시민연대(01)	*녹색평화시흥시민네트워크 (03)
	*평화아카데미(01)	

그러나, 이 단체는 출범 직후 정치적 탄압을 받고 해체되었고 이어 평화운동을 개척하던 '새로운 평화운동 대중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가 통합하여 1994년 6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결성되었다. 그 뒤 1997년 3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1999년 9월 평화네트워크 등이 잇달아 창립하며 평화운동단체들이 본격 출범하면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급성장했다.

21) 이들 단체들중에서는 명칭에 '평화'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순수, 전문 평화단체라고 보기 힘든 단체도 있다. 그러나 기본 운동의 목표가 평화정신 구현에 있기 때문에 이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운동성격이 평화운동이지만 '평화'라는 표현이 없는 것(예 파병철폐네트워크 등)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3. 한국 평화운동의 발전과 현황

한국의 평화운동은 2001년 9·11 테러와 부시 독트린 이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침공에 이은 이라크침공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평화통일 시민연대 등이 출범하여 비로소 대중성과 전문성을 띠고 다양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이라크 전쟁반대 운동,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 미군기지 반대 운동 등을 거치면서 평화운동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의신문'이 펴낸 '2003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4023개의 단체중 노동조합, 연구단체, 종교관련 단체들을 제외한 시민운동단체는 730여개로 추산(지부조직 제외)된다. 이중 평화운동단체는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12월 20일 현재 39개 정도로 추정되지만 활동이 어느 정도 왕성한 곳은 1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²²⁾ 특히 평화운동단체들의 상근 평화활동가들도 대부분 3명 미만이며, 10명 이상인 단체는 평통사 등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다른 시민운동단체들에 비하여 구조가 매우 열악하다.²³⁾

<표 3> 한국의 평화운동단체 설립연도와 설립단체수 (단위: 개)

연 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합계
창립수	1	1	1	5	-	-	1	2	5	3	7	4	9	-	-	39

한국의 평화운동단체는 <표 3>에서 처럼 북한핵 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고조된 1994년(1차 북핵위기), 1998년(2차 북핵위기), 2002년(3차 북핵위기)을 전후하여 비교적 많이 설립되었다. 특히 평화의 21세기의 기원과 함께 2001년 9·11테러사건, 부시의 '악의축' 발언과 대북적대 정책, 2003년 이라크침공을 전후하여 많은 평화운동단체들이 설립되었다. 그리

22) 시민운동정보센터에 2005년 12월 15일 현재 등재되어 있는 평화관련 단체는 모두 42개이다. 46개이지만 전문연구기관과 종교관련 단체 등은 제외했다. 좁은 의미의 평화운동 단체와 다소 넓은 의미로 해석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정보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도 일부 있어 이에 포함시켰다.

23) 평통사는 중앙에서만 13명 정도가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급여는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나 2004년과 2005년에는 평화운동단체가 1개도 설립되지 않은 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평화운동단체의 수와 조직역량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에 비해 이처럼 낮은 것은 이론정립 미비, 시민대중들의 관심 저조, 재정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평통사 등 몇몇 단체는 매우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한국 평화운동의 잠재성을 확대하여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제4장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 : 평화복합체적 평화조건과 평화운동 쟁점

한국의 평화운동은 1991년 태동에서 2005년 12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동의 의제와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주된 내용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통일, 평화군축, 비핵화, 전쟁반대, 군사주의 극복, 미군철수 등이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의제는 일부는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있지만 일부는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도 있다. 한국 평화운동의 성과를 평화복합체적 평화조건과 주요 쟁점에 따라 제1평화의 조건인 정치군사평화, 제2평화의 조건인 경제평화, 제3평화의 조건인 문화평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제1평화의 조건 : 정치군사평화와 평화운동

1990년 동구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로 탈냉전기를 맞이한 한반도의 질서변화를 규정하는 요인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를 위한 북한위협론에 따른 북미갈등이다. 북미갈등의 심화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변화와 결합하면서 '군사적 충돌'을 내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²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체제보장 요구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전략은 핵 비확산정책의 기조 위에서 유지되고 있을 뿐

24)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1994년 영변 북한핵 개발의혹과 관련 하여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을 가하려 했었다.

만 아니라, 반확산정책 또는 선제공격전략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과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압박과 파병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이 도달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예상할 수 있게 했다. 9·11 이후 미국이 벌리고 있는 해반확산 테러예방전쟁의 성격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21세기 초반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제1평화, 즉 정치군사평화가 매우 중시된다. 이것은 한반도가 분단과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여전히 강한 전쟁의 위협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평화운동은 소극적 평화와 이의 개념을 중시하는 전쟁반대 그리고 전쟁방지를 위한 평화운동이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평화운동의 이슈는 평화통일운동, 반전평화운동, 평화군축과 비핵화운동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추진한 평화단체들은 평화통일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민중통일진영, 종교단체, 일반시민들이 망라된 커다란 평화운동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운동

한국의 평화통일운동은 1945년 분단과 함께 시작되었다.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모두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양대 세력에 맞서 소수 진보세력들이 소위 '평화통일론'을 제창했다. 평화통일을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은 몽양 여운형과 백범 김구이다.

여운형은 미군정인 1946년 5월부터 중간우파를 대표하는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을 주도했고, 그 뒤 중간좌파로서 민주적 사회주의 건설과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에 의한 남북한 평화통일정부수립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운형은 1947년 7월 19일 반대파인 한지근에 의해 암살당했다.

여운형이 피살된 후 김구는 1948년 유엔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의되자 이에 반대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하면서 평화통일을 역설했다.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북한의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정치협상을 가졌으나 실패했다. 그 뒤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김구는 계속 민족의 암함에 호소하여 평화통일의 원칙을 주창하다 1949년 6월 26일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결국 평화통일세력은 북에서 배척받고 남의 이승만 세력에 의하여 암살됨으로써 사실상 남과 북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해방공간에서 평화적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길이 옳았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이 민족사회 전체와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위해 불행한 일이었음은, 김구가 예고한 그대로 6·25전쟁이 터짐으로써 바로 입증되었다.

그 뒤 1950년대 후반 조봉암에 의해 평화통일이 다시 주창되었다. 조봉암은 한국전쟁 이후 무력통일의 실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1956년 11월 혁신정당인 '진보당'을 창당하여 평화통일을 주요 정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1958년 간첩혐의로 구속, 사형을 선고하고 1959년 7월 31일 처형하였다. 조봉암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권력의 음모임과 동시에 냉전적 분위기에 편승한 분단주의자들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탄압이었다.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여운형, 김구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앞선 평화통일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1960년 4·19 직후의 사회대중당 중심으로 평화통일운동이 또 제기되었다. 1960년 4·19 이후 정치활동이 자유로워지자 구진보당계·민주혁신당계 등 혁신계열이 결집하여 1960년 5월 사회대중당을 결성하고 주요 정강으로 평화통일을 내걸었다. 그러나 사회대중당은 내부 노선차이로 분열되고 1961년 박정희의 5·16 군부쿠데타 직후 '포고령'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며, 평화통일운동가들도 상당수가 구속되었다.

1961년 군부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18년 집권기간 동안 일관되게 통일문제를 언급하지 못하도록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봉쇄했다. 평화통일논의도 철저히 금지시키고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를 내세웠다. 민간·재야차원의 박정희 정권시절은 주로 통일운동보다는 독재타도·유신반대 등 민중민주 운동과 노동운동에 집중되었다. 1961년 5월부터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까지의 기간은 평화통일운동의 암흑기로 평가된다.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면서 '통일이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하는 뜨거운 논쟁이 학생운동과 재야진영에서 뜨겁게 전개 되었다. 정부차원에서 통일문제가 언급되자 민간차원에서 1980년대 초·중반부터 대중적 평화통일운동이 새롭게 발아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9년 문익환·임수경의 방북은 비록 남한 내에서 냉전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었으나, 대중적 평화통일운동을 본격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의 평화통일운동은 1980년대의 비판과 대안을 통해 다소 수정되었지만 역시 부분적으로 한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운동은 정세의 변화와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 과정에서 발전과 분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역동적인 정세 변화와 시민사회 내의 민주개혁·평화·자주·통일 역량의 성숙으로 1990년대 중후반에서 현재까지 여러 형태의 다차원적 평화통일운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1989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는 정부와 시민사회, 재야차원에서 모두 평화통일을 핵심적 통일방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평화통일운동 진영은 이 기간동안 북한바로알기에서 시작하여 북한돕기운동을 비롯하여 반미촛불집회, 이라크반전평화운동 등을 통해 다양하게 영역을 확대하며 평화통일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통일운동은 단체가 너무 많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효과는 미약했다. 더구나 각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실질적인 평화통일의 증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6·15실천과 촛불집회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우익친미세력들이 '북한 지원'을 '퍼주기'로 비판하고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까지 반대하는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북한 자진붕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는 흡수통일을 반대하며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05년의 평화통일운동은 해방60년, 분단60년을 맞이하여 반전평화와 함께 강한 깃발로 나부끼었다. 2003년 11월 23일 금강산에서 남·북·해의 실무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결성된 '6·15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공동준비위(6·15공준위)'는 6·15 5돌, 광복60돌이 되는 2005년을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 계기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 6·15공준위는 남과 북 해외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설적 3자연대 평화통일운동 기구로 확대 재편된다. 6·15실천운동은 남북한, 해외가 6·15 공동선언을 함께 실천하지는 의미의 평화통일운동이다. 2005년 6월 15일, 8월 15일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6·15실천을 위한 공동행사를 개최한 것

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²⁵⁾

2005년 평화통일운동과 관련 하여 특기할 만한 일은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만들기 등 30여단체가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을 전개한 점이다. 이들 단체들은 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바탕을 둔 '2(남, 북)+2(미국, 중국)' 평화체제가 가장 현실인 것으로 보고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 동의 운동'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통일관련 단체들의 관심 저조와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대응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 반전평화운동 : 이라크파병반대운동·미군기지 확장저지운동

21세기 들어와 한국의 평화운동이 평화통일운동 일변도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분화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평화운동이 소극적 의미에서 '반전운동'이라고 할 때 평화운동의 중심영역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평화운동이 보편적, 세계적 평화운동의 차원으로 결합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반면에 평화의 21세기를 갈망해온 인류에게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다는 측면에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① 미국의 대북전쟁 기획 철폐 ② 한·미동맹 체제 해체 ③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주한미군 재배치 반대 ④ 한·미 합동군사 훈련 반대 ⑤ 한국군 이라크파병반대 등을 포괄한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대미 종속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미주평화'의 성격이 강한 운동이다. 특히 반전평화운동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구도'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이다. 한국의 반전평화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라크파병반대운동과 미군기지 확장저지운동이다.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반대와 철수에 초점을 둔 반전 평화운동이다. 이라크파병반대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설이 나돌던 2002년에 시작되어 2005년 12월 20일 현재까지 반전평화운동의 최대 쟁점이다. 파병반대 운동은 2003년 3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개시를 전후하여 확대되었고,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이 구체화된 2003년 9월 361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구성해 파병반대운동은 전국화, 대중화되었다.

25) 김승국, "2004 평화통일운동 양상", 『평화만들기』, 2005년 9월 10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전 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해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주둔 중단과 철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국 반전평화운동이 파병, 추가파병, 파병연장 등의 자체를 막아내진 못했지만 평화지향적 외교·안보 정책질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점은 하나의 작은 성과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함께 절정에 달했던 파병반대운동을 통해 한국 평화운동진영은 반전평화운동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킨 것도 또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1차 파병 때 일사천리로 사회·재가부대를 파견했던 정부는 2차 파병 문제는 3개월 넘게 시간을 끌었다. 이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지속적으로 벌인 파병반대투쟁과 국민들의 반전여론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파병반대국민행동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는 끝내 1, 2차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국방부는 2005년 12월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의 병력 1000명을 감축하되, 나머지 병력 2600명에 대한 파병을 2006년 12월 까지 1년간 재연장하는 국회동의안을 처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날까지 아래로부터 범국민적인 반전평화 운동을 강화해 학살과 점령 종식, 완전 철수를 위해 전면적인 철군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반대운동은 2005년 12월 참여연대가 국회감시전문 사이트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찬반입장을 추적하여 이들에 대한 비판, 격려를 유도해 관심을 끌었다.

이라크파병반대운동에 이어 반전평화운동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운동이다. 미국은 남한에서 용산미군기지과 미2사단을 2008년을 전후하여 평택으로 이전하는 등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 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관철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봉쇄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운동은 평택주민과 평화운동단체, 시민사회, 민중통일진영 등이 망라되어 총력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평택 평성주민대책위원회와 평통사 등 114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평택미

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2005년 2월 22일 결성되어 미군기지 확장저지운동을 본격화했다. 평택범대위는 사실상 2003년부터 미군기지 확장반대 활동을 전개해 왔다.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와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주민들이 구성한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가 2년 넘게 싸워온 결과물로 평택범대위가 전국조직으로 확대된 것이다.²⁶⁾

평택범대위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중심 운동과제로 하여 공동운동을 전개하는 사안별, 한시적, 협의적 연대운동기구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쉽게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저지하여,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 토지수용을 저지, 굴욕적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용부담을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평택범대위는 2005년 7월과 12월 1, 2차 평화대행진을 개최하여 미군기지 확장저지운동을 전국적 규모로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 2004년은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된 행사라면 2005년의 평화대행진은 평택주민들이 강하게 결합하여 진행됐다. 평택 주민들은 '평화바람'과 함께 전국을 유랑하며 미군기지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평택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관심과 지지를 호소해온 것이 큰 힘이 됐다.

그 결과 평화대행진에는 평택주민과 각계각층에서 1차 1만2000명, 2차 6000명이 참석하여 '우리 땅은 생명 평화, 미군에게 한 평도 내 줄 수 없다'며 인간띠잇기 등을 통해 시위를 벌였다. 2km에 달하는 미군기지 철조망에 소지천을 매달고 일부 철조망이 뜯겨나간 평화대행진은 2005년 5·18 25주년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투쟁과 함께 새로운 반미 대중평화운동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줌으로써 반미평화운동의 새 이정표로 기록되었다.

이밖에도 일본의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 저지운동도 일본 현지에서 전개하기

26) 국내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평택주민대책위와 연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년 간의 시기이다. 평택시민모임의 승리에 힘을 얻은 전국 미군기지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우리 땅미군기지퇴치전국공동대책위(현재의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라는 연대기구를 꾸리게 계기가 됐다. 이 기구는 그 뒤로 소파개정국민행동, 메항리범대위, 여중생범대위,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등으로 맥을 이어갔다.

도 했다. 그리고 징병제를 반대하고 모병제를 추진하는 운동도 전개됐다. 모병제 추진운동은 1999년 11월 징병제 반대모임을 결성한데 이어 그해 12월 군가산점 위원판결을 계기로 확대됐다. 2002년 5월 국민운동 차원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군대내의 인권유린 사례를 밝히는 한편 이상적인 군대의 대안윤 제시하고 있다.

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군축과 비핵화운동

평화운동단체들은 정치군사평화의 핵심인 '평화군축'에도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운동이슈로 제기해 왔다.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네트워크 등은 국방부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방개혁과 병력 및 국방비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국방부가 2005년 9월 13일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자 평화관련 단체들은 국방비의 무리한 증액은 남북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평화단체들은 전력증강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불러오며 이는 우리의 평화환경을 위협하므로 국방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평화단체 내의 일부 목소리는 미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전체의 평화군축을 동시에 추진해야지 한국만의 평화군축은 강대국의 또 다른 종속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국방비를 천문학적으로 책정하고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미종속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대미 군사장비의 수입이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키'가 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운동은 남과 북의 비핵화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1994년 북한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제1차 위기가 제네바합의로 일단 봉쇄되었지만 1998년과 2002년 10월 위기가 재연되었다.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성공은 미지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27) 평통사는 2005년 11월 29일 2006년도 22조8천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에 대한 삭감과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운동을 전개해 왔다.

평화단체 중심의 한반도 비핵화운동은 주로 정책적, 학술적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운동전략과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시민사회와 민중통일진영 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다. 즉, 미·중·러 등 주변 강대국들은 모두 핵무장국가이고,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핵무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현실주의적 주장이다. 이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운동은 커다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논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이 2006년 2월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평화운동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의 시민·평화단체, 환경단체, 민중·통일단체 등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 15일 철회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가동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은 현재 43톤이 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을 가동한다면 나가사키형 핵폭탄을 매년 1300여개나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된다. 일본 내에서조차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로카쇼무라 공장 가동은 세계적인 핵비확산 노력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불안과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평화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동북아의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의 위험을 널리 알리고 가동계획의 철회를 위해 한국의 평화단체들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등 깃발을 들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 제2평화의 조건 : 경제평화와 평화운동

경제평화운동은 본질적으로 폭력과 착취가 아닌 '창조적 나눔의 정신'에서 출발한다. 경제평화는 정치군사평화와 문화평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확대의 변수가 된다. 경제적 착취와 부조리, 불평등은 그 자체가 평화의 반대인 '폭력'이 되고, 이것은 정치군사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평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바로 부의 합리적 배분과 창조적 나눔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평화운동은 몇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세계적 차원과 닮은 사회의 경제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을 위한 측면에서 진행되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운동이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안운동

한국사회, 특히 남한의 경제평화운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운동으로 압축된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다이아몬드형 사회'에서 '모래시계형 사회'로 급속히 재편되어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영향이 곳곳으로 침투하면서 경제 전 분야에서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수준의 빈곤층이며, 상·하위 10% 계층간 소득 격차도 18배에 이른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노동자, 농민과 비정규직의 빈곤화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범국민적 차원에서 경제적 평화운동이 강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경제평화운동은 1997년 외환위기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중운동진영은 특히 2005년 11월 23일 쌀협상 비준안의 통과를 전후하여 격렬한 쌀 개방반대 운동을 벌였다.²⁸⁾ 2005년 12월에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쌀개방 반대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권리보장의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노동자와 농민 중심의 평화세력들은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경주, 부산 등지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전 세계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고루 배분할 수 있다는 허구적 신화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란 구호의 허구성은 국가나 사회 구성원 사이의 극심한 양극화와 다수 민중들의 고통 심화로 현실화되고 있다.

28)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전용철 농민 등이 사망하고 상당부가 부상을 입었다. 농민들은 2005년 12월 고 전용철 농민의 추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350만명의 농민의 이름으로 쌀협상 국회비준 무효를 선언하고, 농민대회 살인진압을 규탄했다.

2) 남북평화경협운동

북한에 대한 경제평화운동은 평화통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화통일관련 단체들중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은 북한에 대한 식량, 의약품, 생필품 등 물질적 남북 나눔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남북나눔운동은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개량한옥 100채를 지어주었다. 동북아평화연대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재외동포사업본부 등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 한민족의 민족통일성 회복과 교류지원 사업을 다각 전개했다.

물질적 남북 나눔에서 이제는 한 단계 발전하여 직접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잇달아 북한에 건립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업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견인해 내는 '평화창출사업들'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남북경제평화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되고 있다. 즉 기존의 남북경협 및 관광관련 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2005년 12월 8일 '남북경협시민연대'를 출범시키고 상생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제시 운동 중심으로 경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에 나섰다. 이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뛰어넘어 경제논리로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사업성 등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끌려 다니는 사업이 아닌 끌어당기는 대북사업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제정의실천운동

경제평화는 생명의 기본조건, 즉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평화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빈곤층 확대, 환경파괴 등을 야기하는 국가 또는 세계 경제체제를 친인간적, 친공동체적, 친환경적인 것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도입 등을 목표로 한다. 경제평화는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합리적인 생산과 이득의 분배, 인간적 노동, 경제자원의 군사화거부 등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경제평화는 경제적 불평등²⁹⁾의 극복을 우선시하며, 이를 위해 생활수준의 개

29) 경제적 불평등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개인의 능력과 기회의 차이뿐 강조하는 인적자본론, 작업조직을 중심으로 기업특수적 숙련과 기업내 장기근속 노동자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내부노동시장이론(또는 경제적 내부노동시장이론), 내부노동시장이론의 통제기능

선, 성장과실의 공정한 배분, 경제적 의사결정권의 형평성, 나아가 국가간 또는 다국적기업과 국가간 무역불균형 해소로까지 이어진다. 경제평화는 특히 자원과 식량, 에너지 등의 수출입을 통제하거나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나 개인에게 위협하는 시킨·상환·행위 등도 배제하는 것이다.³⁰⁾ 그리고 유성적 경제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인 마약, 조직적 범죄, 불법이민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한다.

경제평화문제는 한국의 평화운동의 일반적 영역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지만 평화문제의 본질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이다. 한국 시민운동단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89년 창립과 함께 빈부격차 해소, 부정부패추방,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의 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³¹⁾

경실련과 함께 토지정의와 부정부패추방 관련 단체들이 그 뒤 잇달아 출범하면서 소비자운동,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소액주주운동, 의약분업운동, 투명사회운동, 난개발방지와 친환경개발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되었다. 2005년은 특히 경실련이 주도한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은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고통을 감소시켜 주었다는 측면에서 경제평화에 비교적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을 강조하며 분할지배 전략을 강조하는 좌파적 내부노동시장이론(또는 정치적 내부노동시장이론), 사회적 차원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착취관계가 형성된다는 마르크스주의 계급분석의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평등이론들은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국내적 차원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 불평등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서울: 나남, 1993), 41쪽.

30) 미·소 대결시 군비경쟁은 악순환을 거듭하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대결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보다 더 강한 경제력을 보유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한 끝에 경제력을 안보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많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은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한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대공산권 수출통제체계(COCOM)를 만들었으며, 이것을 어기는 국가에 대해 수출입통제, 금융통제 등 경제제재의 수단을 사용하여 관련국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됐다.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4).

31) 장영권,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서울: 청어, 2003) 참조.

3. 제3평화의 조건: 문화평화와 평화운동

정치군사평화운동과 경제평화운동이 대체로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면 제3의 평화인 문화평화와 문화평화운동은 지극히 개인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적 평화는 개인의 평온을 추구하는 미시적인 것에서 국가와 국가간의 민족주의까지 거시적인 것이 모두 망라된다. 미시적인 것인 생명평화운동, 중범위론의 인권보호·비폭력 편견제거운동, 거시적인 것인 민족주의 해소 등은 문화평화운동의 주된 이슈이다.

1) 민족주의 해소운동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하여 자기 민족의 이익이나 가치, 우월감을 나타낼 때 강조된다. 민족주의는 정치인들이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를 마스크들이 확대, 왜곡하면서 부추기는 경향이 강하다. 민족주의는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표출되기 때문에 폭력성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민족주의는 국가통합과 국민역량 확대에는 긍정적인 작용하지만 이것이 왜곡, 폐쇄되면 갈등과 대립을 가져온다.

동북아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은 과거 영토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강한 기억으로 인하여 상호 배타적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민족주의가 강하게 뿌리를 틀고 있다. 특히 도서(섬), 역사, 해저자원 문제 등과 민족주의가 합쳐지면 폭발력이 더욱 커진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민족주의 감정은 서적, 신문, 인터넷 그리고 가두시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대다수가 상대국에 대한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민족주의 감정은 이웃국과의 외교 협력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며, 동북아의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도 경계심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영토 분쟁 및 역사 관련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강고한 입장을 취하게 하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 감정이 이토록 강한 것일까? 첫째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한국, 중국이 겪은 고통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둘째는 자국의 국내정치적 상황과 경제침체, 문화적 우월감에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

이다.³²⁾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평화를 확대하기 위해선 과거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일본정부가 동아시아 침략 전쟁 및 강점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보상도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하여 일본이 동북아의 평화세력으로 돌아오도록 요구해왔다. 또한 한국 평화단체들은 한국의 대외침략과 극악 행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를테면,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전쟁 중, 그리고 기나긴 군사 독재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점들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한·중·일 3국의 평화양심세력들이 연대하여 2005년 5월 공동역사 부교재를 출간한 것은 동북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³³⁾ 한중일 3국 평화단체들은 2002년 5월, 총 12명의 한중일 공동 역사부교재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집필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여 3국 공동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공동교과서'가 출간했다. 공동교재출판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가운데 출판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컸다.

2) 생명평화운동

최근 들어 평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생명과 평화의 본질이 중시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문화평화운동으로 형성되고 있다. 비록 '독특한 사상'을 가진 몇몇 개인이나 종교인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확대되면서 하나의 평화운동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것을 문화평화운동 중 '생명평화운동'이라고 할 있다.

생명평화운동은 생명존중, 생태환경보호, 수양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생명평화운동의 한 형태인 단학(丹學)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32) 중국은 1989년 천안문 평장 사건 이후 정부가 애국교육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겼다. 또한 중국인들이 '굴욕의 세기'를 극복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그 역사적 위상을 되찾고자 한 측면이 강하다.

33)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 교육개혁시민연대 등 9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2001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를 결성해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해 왔다.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단학의 발원지로 알려진 전북 완주 모악산은 '명상특구'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영국 브라질 등 국외에서도 명상체험을 위해 매년 모악산을 찾고 있고, 그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4월과 7월, 9월에 미국, 일본 명상여행단이 방문한데 10월에도 영국, 미국, 일본인 명상단 100여명이 단학 명상체험을 위해 완주군과 모악산을 찾았다.

또한 오래전부터 생명평화운동을 전개해온 김지하 시인의 쾌적도 폭력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커다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그는 '생명과 평화의 길' 이사장으로 활동 하며 '지역생명과 평화운동'을 강조하며 "친환경 유기농은 생명운동이고 참다운 평화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노벨평화상 후보 물망에 올랐던 고은 시인도 '평화문학'을 강조하며 문학을 통한 평화의 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문인들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감성을 중시하며 평화문학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불교에서도 생명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도적 스님은 경남 함양군 안의면 황대부락에서 조그만 암자(법천사)를 짓고 중생을 계도하고 있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비구니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18년 동안 생명평화 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뛰어난 평화 업적을 쌓아 왔다. 그는 특히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투하로 억울하게 죽어간 7만여명의 한국인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와 추모사업을 벌여왔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핵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청소년교육수련관'을 건립중에 있다.

3) 인권·비폭력 운동

평화운동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전쟁의 방지 또는 중단, 평화회복운동이다. 이것은 전쟁의 방지가 평화운동의 사실상 1차적 대상임을 뜻한다. 전쟁의 방지가 중요한 것은 전쟁이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폭력이고, 인권유린은 물론 엄청난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전쟁방지 운동이지만 본질은 생명운동, 인권운동, 비폭력운동이다. 문화평화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나 사회, 국가의 폭력가치 또는 정의의 폭력론 같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념, 가치 등을 평화의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의 출발이 인권운동이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분단, 전쟁, 독재정권의 폭력속에서 성장해 왔다. 반독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이 유린되었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1993년 3월 인권운동사랑방 등의 단체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시민사회차원에서 출발된 인권운동이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인권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인 자유권은 많이 확대되었지만 경제적,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미국과 유엔 등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다. 더구나 이들과 한국의 보수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2005년 12월 8일 서울에서 북한 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의 인권을 내세우는 이면에 북한 체제의 전복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인권과 관련 인간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폭력은 대체로 폭력의 경험과 기억, 상처에서 되풀이 된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이것이 사회적, 국가적 폭력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선 반드시 폭력을 근절시키고 평화의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화해와 용서가 필요하다. 특히 폭력은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므로 이의 계도와 치유가 필요하다. 학교생활에서의 비폭력과 편견을 제거하는 일은 평화로운 사회건설에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폭력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비폭력 편견제거 운동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왕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펼쳐졌다. 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8월 청소년 약 4천여명이 참여해 제주에서 판문점까지의 '비폭력과 반편견'을 주제로 평화대행진과 청소년 평화선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 비폭력운동은 현재까지 일회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 참여단체도 소수이지만 교육자치와 함께 소그룹단위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한국 평화운동 15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한국 평화운동 15년의 평가

전통적인 평화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1평화의 조건인 정치군사평화

인 전쟁의 예방과 중지, 전쟁기구(war instruments)의 해체, 군비축소, 전쟁원인의 제거 등에 초점을 뒀다. 이러한 평화운동은 21세기 한반도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비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 등의 중심이 되는 제2평화의 조건인 경제평화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불평등, 빈곤, 착취와 수탈, 환경파괴 등도 새로운 평화운동의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성차별과 인종차별, 인권침해, 인종적 종교적 갈등과 민족문제, 식민주의와 원주민의 소외 등 종교 이념 가치와 관련된 제3평화의 조건인 문화평화운동을 망라하면 평화운동의 영역은 실로 광범위하며 다양하고 중층적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사실상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통일운동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운동으로서의 독자성을 갖지 못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탈냉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태동해서 19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평화관련 단체들이 잇달아 창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내부의 평화부문이 활성화되었고 종교·여성·문화예술 단체들과 학생단체들의 반전 평화운동도 활발해졌다. 이 기간에 대학에서도 평화연구소들이 잇달아 문을 열었고, 평화이슈에 관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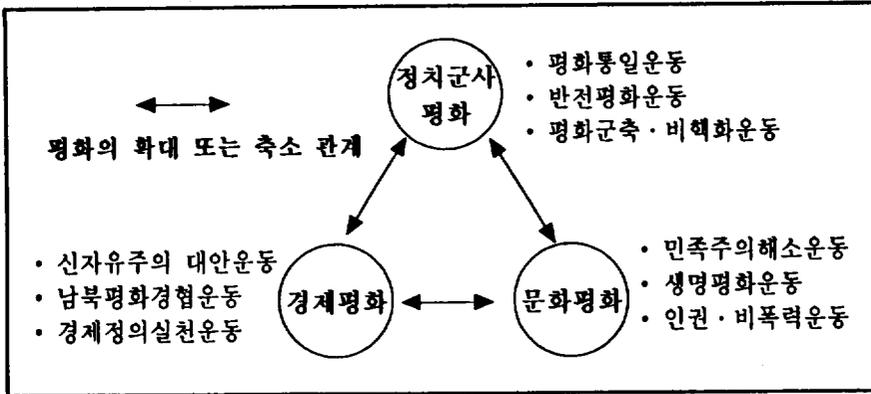
21세기가 들어서자 국내외에서 평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평화운동도 본격적인 대중화, 전문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특히 2001년 9·11 사건이후 미국의 '반테러 전쟁', 부시의 대북한 적대정책과 한반도 전쟁 위기의식의 고조 등이 계기가 되어 독자적인 평화운동단체와 네트워크들이 생겨나는 등 평화운동이 본격화됐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이처럼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적극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운동의 지평을 크게 넓힌 점을 하나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아 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전쟁정책과 이에 대한 반대와 한반도평화의 열망으로 환치되면서 한국의 평화운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다시 말한다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켰고, 이것은 평화통일, 반전평화, 반미자주 등의 기존운동이 세계적 차원의 평화운동으로 접목되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운동의 방법 면에서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촛불시위에 이어 침묵시위, 1인 릴레이 시위, 평화쪽지 보내기, 온라인서명하기, 반전평화 피포먼스, 평화 등불달기, 인

간며, 소지천달기 등 참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 반전 평화의 공감대를 넓혔다. 이와 같은 평화운동의 방법은 반전평화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운동 등이 국제연대를 통해 확대되면서 참신하고 선진적인 방법들을 흡수하고 이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적극성과 한국성을 드러냈다.³⁴⁾

<표 4> 평화조건과 평화운동 의제의 연결구조



한국의 평화운동은 또한 시민사회와 민중통일에서 평화운동진영으로 분리·발전되었고, 이와 함께 전국화에서 지역화로, 그리고 정치군사평화 영역 중심에서 경제평화, 문화평화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주도한 평화운동은 본질적인 생명평화운동으로 한국 평화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가 일제침탈, 분단, 전쟁, 이념대립, 군부쿠데타 등을 겪으면서 국토의 곳곳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또한 미군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 가능성 확대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34) 6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된 2005년 12월 13~18일 한국에서 입국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500여명은 '반WTO'시위를 벌였다. 한국 시위대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해상시위를 벌였는가 하면 'WTO체제는 민중의 죽음'이란 뜻의 상징물로 상여를 이용한 시위를 벌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홍콩 반WTO 시위대는 세계 39개국에서 9000여명이 참가했으며 한국이 단일 국가규모로는 최대였다. 『조선일보』2005년 12월 14일.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³⁵⁾ 차원에서 비록 몇 십 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평화로의 승화작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확대로 생명의 땅이 유린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주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으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생태환경이 파괴되면서 평화의 소중함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평화운동은 기존의 정치군사평화에서 경제평화와 문화평화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평화운동은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에서 분화되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의 1990년대 이후의 반미운동과 2000년대의 반전운동이 평화운동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평화운동진영은 시민단체, 민중통일, 노동자·농민, 종교단체 진영에서 분리, 독자화되었고, 그러면서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학계, 일반시민 등 모든 계층을 포괄하며 선두에서 이끄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담론으로 추동해 내고 있다.

2. 한국 평화운동의 특징과 향후 과제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평화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은 측면이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이론, 조직, 전략, 운동모델 등에서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 평화운동의 주된 특징과 과제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1) 평화와 평화운동이론과 전략의 개발

한국의 평화운동은 다양화, 중층화하고 있지만 그 운동이론이나 전개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평화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평화이론과 전략의 빈곤'이다. 평화운동은 그 운동의 중요성이 큰 만큼 시민대

35) 평화를 이슈로 담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평화의 섬'으로 상정되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경기도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2005년 8월 도라산일대에서 세계평화축진을 개최하기도 했다.

중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화운동은 이론과 전략의 치밀성 부재로 일반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하이 평화연구기관이 잇달아 설립되고 있지만 아직 연구결과물들이 평화운동에 깊이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평화운동이 보다 대중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평화이론과 전략이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 평화운동의 이론과 전략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이다. 평화는 공존공생과 다양성의 삶 또는 관용, 배려, 나눔의 질서를 생활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착취와 억압이 아닌 호혜평등한 경제체제와 공존과 보편을 위한 문화적 정체성을 창출해야 한다.

2) 지속적인 운동의제와 일상적 운동모델 창출

한국의 평화운동은 단기간 또는 일회성 또는 이벤트성의 활동에 치우쳐 있고, 일반 대중과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제나 모델을 창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평화운동의 의제는 생활의 질, 평등, 개인적 자아실현, 인간적 권리 등 일상 생활세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치들을 보다 지속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른바 '운동권'이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일반 시민대중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룩해 놓은 평화관련 단체와 소모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운동의 큰 물결을 창조해낼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평화운동은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평화교육과 평화담론의 확대

한국의 평화운동단체와 평화운동가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반전평화운동 등을 전개했지만 대중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의 평화교육과 담론형성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³⁶⁾ 이것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동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에

36) 정경란, "9·11이후 평화운동". http://board.mailtop.net/board1/data/kncc_pds(검색일 : 2005년 12월 5일).

대한 평화교육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담론확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정치군사적 의제보다는 인간의 본성, 생명의 존엄성, 자연과의 조화 등에 역점을 두어 내공을 확보한 연후에 제도적, 정치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 시민대중들은 거대담론에 기피증이 있는 만큼 작으면서도 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 담론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영상, 평화기행, 평화문학, 평화사진 등을 통한 평화교육과 담론은 평화감성을 키우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4) 지역과 중앙의 조화와 국내-국제연대 강화

한국의 평화운동은 중앙 중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평화운동이 대중화, 지속화, 일상화하려면 지역과 중앙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과 군산, 광주 등의 사례는 비교적 긍정적인 경우이다. 지역 평화운동 이슈가 전국화되면서 지역과 중앙이 하나의 운동조직을 구성하여 강력한 평화운동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개인이나 소그룹 중심으로 생명평화를 강조하여 평화감성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평화바람은 국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과 중앙의 이슈와 과제를 국내연대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국가간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 등 주변 이웃국가와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5) 남성중심의 군사주의 문화 극복

한국의 평화운동은 '국가안보'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인간안보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평화담론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은 국가의 무력기관인 군대가 다른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지극히 군사화되어 있는 사회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안보'라는 것을 자연히 군대와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군사주의는 그 속성상 국가주의와 남성주의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군사주의는 본질적으로 폭력성이 내재해 있는 만큼 문화평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군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권중심의 안보관에서 인간중심의 평화관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시민사회와 단체간의 다양한 갈등 해소

특히 한국의 평화운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촛불시위, 반미평화,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한 시민사회 내부의 이념갈등에서 비롯된 소위 '남남갈등'문제이다. 한반도의 정치군사 평화와 관련하여 반미와 친미, 친북과 반북,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반전과 반핵, 평화와 국익 등과 같은 이분법적 논리가 국민여론을 양분화하고 있다. 또한 평화운동단체들의 자체 역량부족으로 같은 진영의 연대운동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간의 미묘한 노선차이나 힘겨루기 양상으로 연대운동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파행을 겪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보다 큰 가치에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시민통합과 단체간 연대의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 평화운동의 이론과 전략이 보다 차인 높게 전개되어야 한다.

7) 평화복합체적 평화운동 추진

한국의 평화운동이 보다 국민적인 평화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중화하려면 정치적인 운동을 초월하여 경제평화, 문화평화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기존의 한국의 평화운동은 생활양식과 관계의 변동에 둔 평화운동보다는 여전히 정치적 요구와 정치적 변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 운동은 제1의 평화조건인 정치군사평화운동에만 치중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평화가 여전히 정치·군사적 긴장 상황에 의한 것이지만 평화운동의 심화와 풍요를 위해서는 그 자율성과 정체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의 대안으로 정치군사 평화, 경제평화, 문화평화 등 평화 실현의 실질적인 조건들을 동시 병행하여 추진하는 '평화복합체적 접근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 한국 평화운동의 전망과 새로운 도전

한국의 평화운동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할 시점에 왔다. 한국인들의 평화의식과 조건을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평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보다

큰 비전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찾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복합체적 모델'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기초로 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화복합체적 모델은 남과 북의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한반도 및 동북아의 반전평화, 평화군축, 비핵지대화, 신자유주의반대, 민족주의 등의 평화운동의제에 대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운동 차원에서 대응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세계의 모든 평화운동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9·11테러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세계가 전쟁공포에 노출되어 반전평화운동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즉 평화운동 세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군사주의화 경향으로 각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합동 또는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 지역의 정치군사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이에 대해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군사, 외교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좀더 강한 국내외 연대를 통해 평화복합체적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유도해 내야 한다.

또한 미국 등 각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내에서도 '힘에 의한 평화'나 '정의의 전쟁론'을 선호하는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조차도 북한핵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갖고 '강력한 힘의 구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평화운동의 이론과 전략이 보다 견고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운동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보다 풍부한 평화이론과 평화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하려면 '전지구적 관점(global perspective)'을 형성하여 세계화의 현실 속에서 민족, 인종, 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평화이론과 운동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이제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팎의 이같은 새로운 도전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아시아 평화운동가들과 평화의 조건들을 평화복합체적인

실행에 힘쓰면서도 각국 시민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한·중·일 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정치군사적 긴장, 무역경쟁, 강경 민족주의 경향 등을 누그러뜨리며, 대신에 동아시아 내에서의 진정한 우정과 상호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북아 각국의 개인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특별히 더 중요하다.

한국의 평화운동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동북아의 평화복합체에 의한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중국, 일본과의 평화협력 증진에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이미 일본 역사에 꼭 바로잡기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국이 동북아의 과거 역사를 바로잡고 동북아 국가간의 진정한 사죄, 보상, 그리고 화해와 평화공동발전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동북아의 문화평화를 서둘러 정착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각 나라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타국에 대한 증오 또는 복수로 단단하게 옹고된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를 문화평화로 용해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부상과 패권경쟁은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서 가장 명확한 평화위협 요인이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국의 평화운동단체들은 이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인류의 평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낙관적, 실천적 신념을 갖고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승국, "2004 평화통일운동 양상", 『평화만들기』(2005년 9월 10일)
- 김창수,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서울: 책세상, 2000).
- 김호기,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와 신사회운동", 『경제와 사회』, 1992 여름(1992).
- 渡辺昭夫 외 위음, 권호연 옮김, 『국제정치이론』(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2).
- 이삼성,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전쟁과 평화, 인간의 비극에 관한 정치적 성찰』
(서울: 한길사, 1998).
-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서울: 나남, 1993)
- 요한 갈통, 이재봉 외 번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서울: 들녘, 1998).
- 장영권,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서울: 청어, 2003).
- 장영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안과 이행전략"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토론회
논문집, 2005년 10월.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세계분쟁과 평화운동』(서울: 아르케, 2004).
- 한배호, 『비살생 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서울: 집문당, 2004).
-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서울: 박영사, 2004).
- Keith Suter, "Peace Organization, Nongovernmental",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 Kevin P Clements, Peace Education in Conflict Zones, International Symposium
"Peace Movement and Education in Asia-Pacific Conflict Zones",
Nov.20-22,2001 UNESCO APCEIU, Seoul Korea(2001).
- Rosen, S.J and W.S. Jones, *The Logic International Relational*, 3rd ed., 1980.
- Johan Galtung, "Nach dem Kalten Krieg gespräch mit Erwin Koller",
Zürich(1993).
-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Publications, 1996).
- Johan Galtung, *Peace: Research · Education · Action: Essay in Peace Research*, vol.1 (Copenhagen: Christian Ejlertsen, 1975).